

리비아 모델을 통한 북한의 핵 정책 평가와 전망

한 승 조*, 신 진**

요 약

한반도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2018년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대의 격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군사와 경제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려는 노선을 핵 포기를 통한 경제 중심의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노선의 변화는 리비아의 핵 포기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리비아의 사례(모델)를 교훈으로 왜 북한의 노선 변화가 있었고, 이후 북한의 핵 정책을 포함한 국가 전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이 필요한 시기이다. 리비아 모델은 국제적, 국내적, 국가 지도부의 정세 인식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정책 노선을 평가하였다. 또한 리비아의 핵 포기 이후 국가 상황을 북한과 비교하여 일부 전망해 보았다. 리비아 및 북한에게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리비아는 경제적 실리와 체제의 안정성은 일부 보장받았지만, 유입된 해외자본 및 사상/문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물결 속에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가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리비아의 사례를 기반으로 외교적, 경제적인 실리는 추구하겠지만, 부수적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민주주의 문화, 자유시장의 완전한 개방논리는 최대한 제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Evaluation and Forecast of North Korea's Nuclear Policy through Libya Model

Han Seung Jo*, Shin Jin**

ABSTRACT

The issue of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facing the greatest upheaval in 2018 with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North Korea has pursued the parallel policy developing military and economic at the same time. However, North Korea is changing its route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focus on the economy through summit talks. Since the change in North Korea is similar to that of Libya in the past,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y North Korea is trying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and how the process is flowing compared to the case of Libya. The Libya model was constructed and analyzed in term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erspectives and recognition of the situation by leadership. North Korea's nuclear policy was evaluated based on the Libya model. The nuclear development of Libya and North Korea has caused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ltimately led to instability of the regime. Two countries have tried to abandon nuclear program in order to solve the instability of the regime, also gain the economic reward instead. Libya took economic benefits and secured some of the stability of the regime, but the regime collapsed under the wave of democracy due to the influx of foreign capital and ideas. North Korea will seek diplomatic and economic gains with the example of Libya, but will try to limit as much as possible the culture of democracy and the full opening that can be incidental.

Key words : Inter-Korea Summit, Libya Model, North Korea, Nuclear Policy, US-North Korea Summit

접수일(2018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2018년 9월 23일)

* 국방과학연구소 제1기술연구본부

**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교신저자)

1. 서 론

한반도 안보환경은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8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급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의 3대 지도자인 김정은은 6차 핵실험 후 완성된 핵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2018년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팀을 파견하고, 4월 판문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역대 3번째로 남북정상회담을 실행에 옮겼으며, 6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수행하였다.

북한은 선대에서부터 군사와 경제의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해 왔으며, 김정은도 2013년에 선언한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항구적인 노선으로 공포하여 경제와 핵/미사일로 대표되는 군사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제재로 인해 이러한 노선은 2018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는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의 노선을 변경하였다[1]. 이러한 경제건설 중심의 노선은 기존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성공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군사력보다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다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군사안보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다.

2018년 6월 미북 정상회담은 회담 전에 기대하였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70여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두 정상이 만났다는 점과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 시험장을 폐쇄하였고, 일부 미사일 기지를 없애는 가시적인 모습도 보여 왔으며,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軍 장성급 회담에서는 2018년 6월에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핵·미사일에 버금가는 위험인 장사정포를 MDL에서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논의도 있었다.

이러한 두 정상회담 이후의 합의문은 정치적인 모습으로 세계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이후 이러한

합의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게 가시적으로 구체화되어 이행 되는가는 향후 수개월~수년이 지나면서 차츰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동북아의 남과 북, 미·중·일·러의 국제관계 속에서 변화의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이른 점이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원인과 결과, 결과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한 연구는 최초에 원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018년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의 두 정상회담의 수행이 이루어진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까지의 합의문 중 한반도 비핵화(북한에서의 핵 개발 중단 및 폐기)를 전제로 북한의 핵 정책변화와 유사한 국가들을 분석해 보고, 이를 분석의 틀로 이용하여 향후 북한의 핵 정책을 전망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제사회에서 핵 개발을 추진하였다가 자발적 혹은 타 국가(들)의 강압에 의해 이를 포기한 국가들은 다수 존재한다. 냉전 종식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스스로 핵무기를 처리하였고, 옛 소련이 해체된 후 옛 소련의 공화국이었던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이 자국에 배치되었던 핵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을 약속 받은 후 러시아로 인계된 경우도 있다[2]. 또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은 양국의 협의 하에 핵을 포기하였으며,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정권 위협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로 인해 핵을 포기한 리비아가 있으며, 미국의 CIA에 의한 정보작전으로 핵 개발이 공개되어 형식적으로 포기한 대만이 있다[3]. 핵 개발 과정 중 군사적인 강압(공격)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핵 개발이 중단되거나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판단되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경우도 존재한다[2,3].

핵 개발을 포기한 국가 중에서 독재체제의 국내 정치 환경, 외부 경제제재 등의 압박에 직면해 있었던 상황,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자발적인 핵 포기의 형식을 빌렸다는 점에서 리비아의 핵 정책변화가 북한의 핵 정책 변화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미국 중심으로 북한의 핵 문제의 접근을 리비아 식(先 핵 포기-後 보상)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어 왔기 때문에 리비아의 핵 포기 과정을 연

구의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비아의 핵 정책 변경 배경과 결과를 분석하여 리비아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 적용을 위해 북한과의 공통요인을 염출한 후 북한의 핵 정책 변화의 평가와 전망을 제시하는데 있다.

2. 리비아의 핵 정책 및 모델

리비아의 핵 개발 포기과정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우선적인 핵 개발 중단과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 상황과 리비아의 과거 사례는 일부 유사하다. 또한 동일한 정치 지도자가 핵무기 획득과 프로그램 폐기를 결정한 유일한 국가이며, 이는 북한의 경우와도 동일한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리비아의 핵 개발 및 포기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이용하여 국제적 요인, 국내적 요인, 국가 지도부의 인식(전망이론적 관점)을 기준으로 리비아 모델을 설정하고자 한다.

2.1. 리비아의 핵 개발 및 포기 과정

리비아는 1960~70년대에 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많은 아랍 국가들이 패배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핵 무기를 보유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도자 카다피(Gaddafi)는 국제적으로 핵무기와 관련된 물질을 구매하려고 시도하였고, 특히 1990년대 파키스탄의 핵무기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칸(Khan) 박사와 그 네트워크로부터 관련 물질을 입수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초보적인 핵무기 설계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하지만 1988년과 1989년에 미국의 팬암기와 프랑스의 민간 항공기를 폭파함으로써, 1992년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731호, 제748호, 제883호를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시작되었으며, 1996년에는 미국의 이란-리비아 제재법을 통해 테러 지원과 WMD 획득에 지원을 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경제제재를 적용하기에 이르렀다[4]. 이로 인해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리비아의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게 되고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

는 현상을 보이게 되면서, 국내 체제의 불안정성 우려가 커져 핵 개발로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게 된다[4].

또한 9.11테러,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리비아가 다음을 목표로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4]. 결국 리비아는 2003년에 WMD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기를 공식 발표하고 IAEA 사찰을 허용하였고, 이에 미국은 경제제재 해제와 석유수입을 재개하였다[4].

리비아에서 2003년에 핵 포기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 것은 2006년 이후부터이며,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제외되었다. 하지만 리비아는 서방세계의 지원은 자국이 생각하는 수준의 이하라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자스민 혁명이라 불리는 아랍권의 민주화 운동이 리비아에서도 2010~2011년에 발생하였고, 정권에 반대하는 시민군과 정부군의 무혈 충돌이 발생하였다. 특히 정부군은 공군력으로 무차별하게 시민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공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이 증대되었다. 미국은 서방국가와 협력하여 리비아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정하고 리비아를 공습하는 등 시민군의 편에서 카다피와 정부군에 대항하였다[5].

결국 기존의 평화체제로의 이행과정이 완전히 바뀌고, 카다피는 2011년 10월에 사망함으로써 시민군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또한 카다피 사후 사바(Sabha) 지역에서 IAEA 사찰 도중 WMD가 발견됨으로써 카다피의 핵 포기가 자국의 이득만을 취한 일정부분의 양보였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하였다[5].

2.2. 리비아 모델

기존의 비핵화 모델은 성공한 사례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모델,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델, 리비아 모델, 이라크 모델로 구분 될 수 있다[4,6,7,8].

우크라이나 모델은 보유한 핵무기를 국제적인 보장을 기반으로 포기한 모델이며, 남아프리카 모델은 핵 무기 개발을 성공한 뒤에 스스로 폐기한

모델(단, 현실에서의 위협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음)이며, 리비아 모델은 핵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이며 외교적인 보상을 대가로 포기한 사례이다[4,7,8]. 또한 이라크 모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 3국의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 강압적으로 포기하게 만든 모델로 볼 수 있다[6].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여 해결하려는 의도와 언론에서의 보도는 북한과의 리비아를 유사한 사례로 보려는 직관(Intuition) 및 경험적인 인식 때문이다. 물론 리비아는 핵을 완성하지 않은 단계에서 포기한 경우이며, 북한은 완성된 상태에서 포기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관 및 경험적으로 독재국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 외부로는 자발적인 형태로 핵 포기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더욱 많다.

김기용은 리비아 핵 포기 요인을 내부요인(국가 경제문제, 기술적 한계 등), 외부요인(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 외교적 고립 등), 전략요인(미국의 공세적 WMD 정책 등)으로 구분하였다[6]. 황지환은 대외 안보환경의 변화, 국제사회의 제재, 국제사회의 보상, 국내정권의 성격, 기술적 취약성으로 구분하였다[7]. 박정원의 연구에서도 국내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로 크게 구분하였다[8]. 이는 연구 분석의 관점의 차이이며, 모두 국제적 요인(정치·경제적인 압박), 국내적 요인, 국가 지도부의 국내외 정세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1>은 리비아의 핵 개발 포기 과정과 기존 리비아 사례를 분석한 연구를 기반으로 리비아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요인분석 중에서 국가 지도부의 인식 측면에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의 범주에 속하는 비용 대 효과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나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시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상에서 정치지도자, 경영지도자를 포함

<표 1> 리비아 핵포기 모델

요인분석	
요인	세부내용
국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미국 - 내용 : UN 안보리 결의안, 적성국 교역법 및 국제무기거래규정 등 (30년간 경제 제재로 성장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적 압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미국 - 내용 : 테러지원국 지정, 중동에서 이라크 이후의 공격 대상으로 고려 (선제공격 가능성: 2002 핵 태세 검토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적 고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외교단교국 149개국 -> 1995년 186개국으로 증가[6]
국내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권존립 악영향에 대한 인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난 및 미국의 차기 공격대상 우려에 따른 핵 개발 위험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 무기 완성을 위한 기술적 한계[6,7]
국가 지도부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망이론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포기는 경제적 이득과 국가 안보에 이득으로 인식(이익영역) - 이익영역에서 위험 회피(핵 포기) 전략으로 전환[4]



결 과	
경제적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경제제재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률 7~8% 이상으로 증가[8]
미국의 군사적 위협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미국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2006년 연락사무소 설치 및 이후 대사관으로 승격[8]
해외 자본 및 민주화 물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자본 및 문화 유입, 자스민 혁명의 영향으로 민주화 물결 확산, 독재체제의 환상 인식 -> 시민군 형성, 정부군과 대립, 공포정치, 인권문제 발생[5] 독재(공포)정치 및 인권문제로 미국 등이 시민군 지원 -> 독재정권 교체(카다피 사망)

한 인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가정하여 발전된 이론이 전망이론이다.

전망이론은 위험상황 하에서의 의사결정이론(D ecision-Making under the Risk)으로 심리학적인

Kahneman과 Tversky가 제시한 이론으로 이익과 관련된 선택에서는 위험 회피적(Risk-Averse) 경향을 보이고, 손실과 연관된 선택에서는 위험 감수적(Risk-Acceptant)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7,9].

핵 개발 시기에는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 이 시기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압박 등으로 손실영역에 있었지만, 위험 감수 전략을 구사하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국내 경제성장이 침체를 겪게 되면서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져갔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 911 테러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져 갔던 시기이다. 따라서 카다피는 이라크와 같이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인식 하에 국내외 정세를 핵개발을 양보하고 경제체제를 해체시키면서 미국과의 대립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익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따라서 전망이론에서의 위험회피 차원에서 핵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3. 북한의 핵 정책

북한은 김일성 집권 시기인 1960년대에 중/소 분쟁이 가속화되고 대외적인 위협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1962년 12월에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공식화하였다. 이는 자체적인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10,11].

이러한 노선은 김정일 시대에서 “선군경제노선”으로 이어졌고, 이는 군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했던 군 중심의 통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10,11]. 이 시기에는 자국 내의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었고, 9.11 테러로 인한 미국 부시정권에서 대북위협도 심각하게 고려함으로써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이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었다. 김정일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체제 위협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국내 결속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당의 공식노선으로 선언하였다 [11]. 이는 선대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핵 및 미사일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우선 완성한 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지원 등을 받아내어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현재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 이후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맞서 스스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고 있다. 김정은은 선대와 같이 장기집권을 목표로 하여, 우선 핵 및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12].

이러한 병진 노선은 2018년을 계기로 “사회주의 경제노선”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 가장 큰 노선의 변경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의 병진 노선은 지나간 것으로써 그 의미가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김정은의 병진 노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이 선언한 최초의 병진 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노선”으로 변경, 즉, 군사보다는 경제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에 중점을 맞추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지도부의 인식과 관련하여 전망이론적 접근을 위해 리비아의 전환점과 연계하여 북한도 2018년을 기점(병진노선에서 경제노선으로 전환)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워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에는 리비아와 동일하게 손실영역으로 판단하고 위험 감수형 전략인 병진노선을 추구하였다. 즉, “경제-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한 이후 국방력 분야에서 북한은 2016년에 4, 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투발수단인 미사일 발사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광명성-3호, 화성-14형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으로써 선대보다는 더욱 더 비대칭 전력의 우위가 가시화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2013년 이후 협동농장과

여러 공장 경영에 자율권을 일부 부여하는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 및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도입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였다[1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노선을 추구한 이후 국민총소득(GNI)은 일부 상승하였으나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은 정체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대외 수출액도 2013년을 계기로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표 2> 북한의 경제성장(2013~2016)[13]

년 도	GNI(십억원)	경제성장률(%)
2013	33,844	1.1
2014	34,236	1.0
2015	34,512	-1.1
2016	36,373	3.9

이러한 북한의 경제 하락세는 2017년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북한으로 들어오는 유류공급을 30% 정도 차단하고, 북한의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제23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서 북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유류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14]. 기존에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인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도 전면 금지하였으며, 해외 진출 북한 노동자가 새로운 고용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불허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15].

이렇듯 북한은 선대의 유산을 완성하면서 우선적으로 군사력을 완성한 후 이를 협상카드로 이용하여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략이 병진 노선에 녹아있었다. 이는 국력차원에서 국방력 강화 외에는 전반적인 퇴보가 확실한 가운데에도 손실을 감수하고 핵 개발에 매진하였으며, 체제 안정성을 핵을 매개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고 기존의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참여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인 옵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리비아와 마찬가지로 정권 유지에 커다란 장애로 다가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변경된 “사회주의 경제노선”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익영역으로 판단하고, 위험 회피형 전략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다. 대북제재의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난, 정권 통치자금의 부족화 등은 핵 개발을 포기하여 얻는 이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미국 등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이익영역으로 돌아 설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특히, 경제안보의 개념 혹은 경제안보 연계(Nexus) 측면에서도 이러한 노선의 변화가 시대에 맞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즉, 동남아시아 위주의 안보-경제 측면에서 성장하였고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당연한 인식의 전환이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전 후 경제 부흥, 1970년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급속한 경제성장, 1990년대 이후 중국 및 인도의 산업화 등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심장으로써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아시아 평화(Pax Asiatica)로 명명된 군사적 갈등의 감소와 병행되었다[16]. 이렇듯 안보가 정착되면 경제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로 경제안보 논리에서는 경제성장이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가 보장될 수 있었다.

4. 리비아 모델을 통한 북한의 핵 정책 평가와 전망

4.1. 리비아 모델을 통한 북한 핵 정책의 평가

<표 1>에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 정책 변화(요인분석 중심)를 분석한 것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2018년 6월 현재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미북 합의문까지 나온 상황에서 본 모델을

<표 3> 북한 핵 정책 변화
(리비아 모델에서의 공통요인 분석)

요인분석		
요인	세부내용	리비아 모델과 유사성
국제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미국(중국 및 러시아 동참) - 내용 : UN 안보리 결의안(2370호) 유류 차단, 섬유 수입 금지 등(정권 통치자금 부족[17] 및 장마당 위기[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적 압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미국 - 내용 : 테러지원국 지정, 미국 본토 위협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으로 군사적 선제공격의 가능성(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적 고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제재에 합류 	○
국내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권존립 악영향에 대한 인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난 및 미국의 차기 공격대상 우려에 따른 핵 개발 위험성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 무기 완성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발 수단 포함 : 잠수함, 탄도 미사일, 야포 등 	X
국가 지도부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망이론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포기는 경제적 이득과 국가 안보에 이득으로 인식(이익영역) - 이익영역에서 위험 회피(핵 포기) 전략으로 전환 	○

통해 요인분석은 가능하나,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정책 및 국가체제의 변화를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공통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리비아 모델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장에서 전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요인 중 경제적 제재분야는 북한의 노선 변화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역

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39호실이 실질적인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이지만, 이 부서의 고위 간부는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통치자금의 심각한 제한을 고백한 바 있다[17]. 또한 탈북자 100여명의 실문을 통해 장마당의 경제영향성에 대한 연구논문[18]에서는 1990년대 계획경제 및 배급제가 붕괴된 상황과 고난의 행군을 거쳐 장마당이 확산되어, 연구시점에는 전국에 750여개의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을 통한 대북제재로 인해 장마당의 붕괴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만약 장마당이 붕괴된다면 다시 한번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이것은 반국가적 사상과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18].

북한은 핵 개발의 경험을 토대로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시리아에서 핵 개발시설로 의심되었던 원전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붕괴되었고, 이스라엘의 시리아 원전시설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책임자가 관여하고 일부 물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19]. 이러한 북한의 핵을 포함한 WMD의 테러국에 대한 지원 우려로 인해 2017년 현재 이란, 수단, 시리아와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 투발 수단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인해 미국 본토까지 위협을 느끼자 군사적인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표명한 바 있다. 2018년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는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서 중국, 이란을 포함한 북한도 자국의 위협이 될 경우 언제든지 핵 공격도 감수하는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위 국가들이 꼭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위협이 있을 경우도 핵 등으로 선제공격이 가능함을 표기함으로써 기존보다 더욱 강경한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국가지도부의 현 정세 인식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망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북한의 핵 정책분야에서 다른 바와 같이 <표 4>로 정리될 수 있다.

<표 4> 핵 정책과 관련하여 리비아와 북한의 전망이론적 관점 비교

구 분	리비아	북한
정책 변경 시기	2003년	2018년
정책 변경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실영역 : 위험 감수(핵 보유 정책) - 이스라엘의 위협, 중동에서의 패권 장악 < 국제사회의 경제압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실영역 : 위험 감수(핵 개발 정책, 병진 노선) - 체제 선진, 향후 협상전략 카드 < 국제사회의 경제압박, 국내 경제난 등
정책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영역 : 위험 회피(핵 보유 포기) - 서방세계와 관계 회복, 미국 포함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해제 및 군사적 위협 완화 > 핵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영역 : 위험 회피(핵 개발 포기, 경제 중심 노선) - 한국과의 경제 협력,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해제 및 미국 중심의 군사적 위협 완화 > 핵 포기

요인분석의 결과 북한의 핵 정책 변화의 원인은 국제적인 요인과 국가지도부의 현 정세 인식 면에서 리비아식 모델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며, 다만 리비아가 핵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포기하였다는 것과 북한은 기술적 완성이 이루어지고 투발수단에 대한 시험까지 한 상태에서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점이 존재한다.

4.2. 북한 핵 정책의 전망

북한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의 성패가 결정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리비아의 핵 포기 이후의 행동을 통해 북한을 전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리비아에서 핵 포기 과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 및 안보위협 감소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해외 자본 및 문화의 유입 등으로 실질적으로 카파피 정권의 실패로 여겨

질 수 있다. 이를 본 북한도 리비아식 핵 포기과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한 북한 내의 민주화 운동 혹은 정권전복 세력의 성장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 중국의 천안문 사태, 그리고 자스민 혁명을 통한 아랍권에서의 정권 붕괴 및 진통은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자국의 경제발전을 추구하겠지만 적극적인 개방개혁을 통한 급속한 민주화 사상이 도입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반대세력의 자비없는 처리를 통한 공포정치도 북한에서는 선대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정치수단이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서방의 자본유입이 더욱 가속화된다면 이러한 인권문제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리비아도 핵 포기의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을 원했으나 기대 이하라고 생각을 했고, 이후 추가적인 협상을 위해서라도 혹은 중동에서의 자국 안보를 위해서라도 핵을 포함한 일부 WMD는 완전한 폐기는 아니었다. 북한도 이러한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이득이 부족할 경우 핵 및 WMD를 지하강도 등에 일부 유지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핵 포기의 대가로 한반도에서 일시적인 평화는 일부 보장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역사였음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도 이미 국력 차원에서나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에 비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또한 국제 관계상 재래무기만으로 한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강대국으로 둘러 쌓인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3대에 걸쳐 완성된 핵 전력을 경제적 이득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처럼 국제사회에는 핵무기가 없다고 공표하면서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다거나, 핵역지의 3가지 수준(최소, 제한적, 최대 핵역지)[3] 중 최소 역지력을 보유하는 입장에서 은밀하게 소량 혹은

기술력을 유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리아도 이스라엘로부터 핵 시설에 공급을 당했음에도 다른 지역에 핵 개발 시설을 신설하였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남북, 미북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의 핵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리비아식 모델이 정치·군사적 관련기관 및 언론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고 선언과 합의의 이행에 대한 신뢰도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렵다. 리비아식 모델을 통해 왜 북한이 2018년도에 기존의 입장과는 상반되게 국제무대로 나오게 되었으며, 왜 핵 개발의 양보 카드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게 되었는지 현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리비아의 모델을 국제적, 국내적, 국가 지도부의 정세 인식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핵 정책 변화의 공동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외교적, 군사적 협상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측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비아 모델을 기반으로 북한이 나아가야 할 핵 정책 중심의 국가 운영에 대한 일부내용을 언급하였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비아의 교훈을 바탕으로 북한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면서 자국의 실리를 위해 최대한 협상에 임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협상의 결과로 해외자본 및 문화, 사상이 주민들에게 확산됨으로써 북한 독재체제의 허구성인 대중화되면서 체제 안정의 불안요인으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에 강경파가 주류인 미 정부와의 약속에 소극적일 수도 없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가장 큰 안보 리스크였던 북한의 핵, 미사일의 비대칭 전력의 획기적인 약화 혹은 완전 제거를 위해 미국, 중국, 북한과의 원만한 외교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북한의 선대에서 기존 약속을 어기고 보상

만을 받고 실제적인 핵 개발 중단을 포기 못한 사례와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핵 문제를 교훈 삼아 너무 낙관적인 입장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5월 미국이 협상 등을 통해 핵 개발을 중지시킨 나라 중 이란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즉, 중동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을 필두로 한 핵 확산의 물결을 탄 이란도 핵 보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201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이란 핵협정 탈퇴를 트럼프 대통령이 2018.5.8.에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19]. 하지만 이러한 협상에서 핵 물질 중심의 협상이었고, 투발수단인 미사일에 대한 협상을 제외되어 있었으며 기존 핵 물질의 완전한 폐기는 빠져있었기 때문에 핵 폐기보다는 동결이라는 의견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나라로부터 의견이 있었다.

이란은 핵협상이 타결된 이후 외국 투자가 늘고, 원유 생산량도 증가하면서, 관광 규모도 성장하여 201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5%를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후퇴하기 시작하였다[20].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의 핵 개발 재게 의심 및 기존 투발수단의 보유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지원만을 바라는 것은 트럼프의 미국 이익 우선주의와 대립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현실화 되었다.

북한도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핵 포기 소극적이거나 미국 등 협상국의 정책이 변하면 기존의 기술과 능력으로 핵 확산을 재개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정상회담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써 향후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경과되고 현실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시점에 적합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북한 로동신문 제 111호(2018.4.21.)
- [2] 한승조, “핵 개발 과정에서의 예상공격 효용성 연구: 이스라엘에 의한 이라크와 시리아 공격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18권, 제1호, pp. 129-141, 2018.
- [3] Andrew Futter(고봉준 역), ‘핵무기의 정치’, 명인문화사, 2017.
- [4] 박상운, “전망이론과 핵 정책의 결정요인”, 동북아연구, 제28권, 제1호, pp. 133-157, 2013.
- [5] 오피니언뉴스,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8>(2018.5.1)
- [6] 김기용, “핵무기 개발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과 후발 핵개발 시도 7개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7]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제 1,2차 북한 핵 위기의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제46권, 제1호, pp. 79-101, 2006.
- [8] 박정원, “2016 핵실험 이후 북한 비핵화의 모색”,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6권, 제3호, pp. 107-124, 2016.
- [9] 황지환,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현상 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이론”, 한국국제정치학회, 제47권, 제3호, pp. 7-25, 2007.
- [10] 하상섭, “북한의 경제-국방 병진 노선과 체제위기 극복효과”,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11] 박형준,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연구”, 북한학연구, 제13권, 제2호, pp. 165-194, 2017.
- [12] 고유환, “북한 핵보유 요인에 관한 역사-구조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제20권, 제1호, pp. 63-88, 2016.
- [13] 통계청 북한통계, <http://kosis.kr/bukhan/index.jsp>
- [14] 장용훈, “도발-제재 악순환 속 강대강 위기 고조 지속”, 통일한국, 제406호, pp. 12-13, 2017.
- [15]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541706>
- [16] 김기석, “경제안보연계분석: 동아시아에 대한 적실성의 점검”,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제2호, pp. 1-34, 2017.
- [17]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606176>
- [18] 최민혁, “북한 장마당이 경제와 체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19]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0/2018051000275.html
- [20]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21604>

[저자소개]



한 승 조 (Han, Seung Jo)
 1998년 2월 육군사관학교 학사
 2002년 2월 KAIST 석사,
 아주대학교 석사
 2011년 9월 (미)뉴욕주립대(비팔로)
 박사과정 수료
 2013년 2월 단국대학교 박사
 現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육군 중령
 email : seungjo1651@add.re.kr



신 진 (Shin, Jin)
 1981년 2월 성균관대학교 학사
 1984년 2월 서울대학교 석사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박사
 現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mail : jinshin@cnu.ac.kr